

Hansun Brief

발행일: 2016년 2월 26일(통권37호) / 발행인: 박재완 / 발행처: 한반도선진화재단 / 서울 중구 퇴계로 197, 407호 / 전화: 02-2275-8391 / email: hansun@hansun.org / www.hansun.org 

이번이 北核 막을 마지막 기회

현 인택

(고려대학교 교수, 전 통일부장관)

* 이 원고는 2월 24일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주최한 한중동북아포럼에서 발표된 기조연설문입니다.

2016년 벽두부터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도발적으로 감행함으로써 한반도의 안보는 물론 동아시아의 안보와 안정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점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물러설 자리가 없다는 점입니다. 북한 핵 개발은 9부 능선을 넘어 거의 정상에 도달해 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은 북한이 멀지 않은 장래에 한반도는 물론이고 미국 본토를 포함하여 세계 어디든 마음만 먹으면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탄을 개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여실히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 핵문제나 장거

리 미사일 문제를 풀 시간이 거의 남지 않았다는 것의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또한 지난 20여년의 북핵 저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그야말로 절박한 위기감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만약 북한이 핵개발에 완전히 성공하여 이를 실천배치하게 된다면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지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에게 치명적인 안보적 어려움을 안겨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국가적 생존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강구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남북간의 대치 상황은 지금보다 더욱 첨예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로인해 생기는 안보의 불

확실성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감과 절박감은 저는 제대로 된 상황인식이라고 봅니다.

더욱이 지금 이러한 위기를 불러오고 있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는 지 지극히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김정은 정권은 자체 내에서 적절하게 견제와 균형을 통해 합리적인 대외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미 상실한 체제입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여러분이 다 목도하고 있는 바와 같이 소위 최고위의 권력자라 하더라도 김정은의 말 한마디에 처형대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공포감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에서 어느 누가 감히, 설령 있다한들, 소위 '합리적인' 제언을 김정은에게 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핵문제나 미사일 문제는 북한의 군부가 권력불안정기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장 좋은 재료입니다. 김정은에게 충성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소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멈추기 어렵습니다. 이것들이 있는 한 그래도 김정은은 군부에게 의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집단의식'이 작용하는 북한의 최고위층에서 목숨을 걸지 않는 한 그 내부의 정서와 조금이라도 다른 얘기를 그것도 최고 지도자에게 할 수 있는 인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것이 소위 체제의 2인자다, 3인자다 하고 회자되는 황병서나 최룡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북한의 실정입니다.

지금 북한은 브레이크가 고장 난 기차입니다. 폭주하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더욱이 더욱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에게 핵과 미사일은 자신의 정통성을 밝혀줄 유일한 무기입니다.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경제발전을 외쳤지만 북한 경제가 하루아침에 나아지지 않습니다. 인민생활 향상 운운 하지만 그것으로 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는 가진 게 부족합니다. 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핵과 미사일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 내부에서 이러한 '핵폭주', '미사일폭주'를 멈추게 할 기제가 스스로 작동하기를 바라기는 지극히 어렵습니다.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적인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이 폭주하는 기관차는 멈추기 어렵습니다.

북한의 핵도발,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박근혜대통령은 지난 국회연설에서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즉, "북한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체제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도록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저는 우리 대통령과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잘 대처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이 북핵을 막을 마지막 기회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영원히 후회하게 될 지도 모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가 달린 문제입니다. 그런 정도의 절박감과 위기감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처해야 합니다. 그야말로 신발 끈을 다시 고쳐 매고, 각오를 단단히 하고 해결에 임해야 합니다. 어떤 대가를 치루더라도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나서야 할 것입니다. 하다 말 조치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정부의 조치에는 한계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무슨 조치를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구체적 조치들은 두 가지 기준에 비추어 그 선택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는 그것이 대한민국의 안보에 바람직하냐이고, 다른 하나는 실현성의 문제입니다. 바람직하고, 실현성이 있는 조치만이 정책적 대안으로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사회 일각에서 주장되어지는 '핵무장론'은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안되는 바는 아니나 문제 해결의 정도(正道)는 아닙니다. 지금은 북한의 비핵화에 우리의 남은 모든 노력과 열정을 쏟을 때입니다. 우리의 핵무장 주장은 그러한 노력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북핵 문제 해결에 힘을 빌려야 할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미국의 동의조차 받아내기 어려

운 게 현실입니다. 더욱이 북핵 해결에 국론을 하나로 결집해야 하는 중대한 시점에 또 다른 논쟁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우리의 힘이 분산되는 부정적 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우리는 북핵 해결의 싸움에서는 한 발을 묶고 경기하는 선수와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한계 속에서도 우리가 가진 남은 모든 옵션들을 지혜롭게 동원하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대통령의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에는 비단 우리 스스로의 조치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 같이 협력해서 할 조치까지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치들은 주지하다시피 크게 세 가지 것들을 포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는 한국의 독자적 조치, 둘째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조치, 셋째는 미국에 의한 조치들입니다. 한국의 독자적 조치들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유엔에 의한 제재조치는 조만간 결정이 되어 질 것입니다. 미국에 의한 조치도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조치들은 과거에 비추어 매우 신속하고 그 강도에 있어서 이례적입니다. 미국의 상하원은 "대북한제재법"을 통과시켰고, 오바마 대통령은 신속하게 이에 서명하였습니다. 이제 미국의 행정부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를 집행하느냐만 남아있습니다. 미국의 대북제재법은 대이란제재법보다는 다소 강도가 떨어지지만 대단히 강력한 제재법입니다. 이 대북제재법은 북한의 금융·경제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능력 향상, 북한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를 획득하기 어렵게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동시에 관련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재의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할 수도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광물 거래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북한의 광물거래에 대한 제재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

는 북한의 주요 수출품이자 외화 수입원인 광물 거래를 제재함으로써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돈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제 미국 행정부는 북한을 제재할 강력한 수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과거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들 중에 가장 효과적인 조치가 바로 'BDA (방코델타아시아) 조치'였습니다. 이는 북한과 거래하는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secondary boycott)을 적용하는 것으로 일개 은행에 대한 조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번 미국의 대북제재법은 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미국 행정부에 줌으로써 미국 정부는 마음만 먹으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들을 제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북한의 대외무역의 대부분 (대략 90% 정도)이 중국과의 교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중 약 40%는 광물자원들이기 때문에 만약 미국이 대북제재법의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적용한다면 가장 피해를 입는 기업들은 중국 기업들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이라도 향후 중국정부의 대응이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이번 회의가 한중관계를 다루는 회의이고 여기에 중국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중국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북핵문제에 관해서 한국이(제가 해석하는) 중국에 대해서 갖는 솔직한 감정은 두 가지입니다. 즉, 한편으로는 '기대'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려'라는 반대 감정이 상존합니다. 기대는 당연히 중국이 그래도 해결을 위한 결정적인 기여를 해주지 않을까하는 바램입니다. 우려는 "'역시나' 중국은 럽서비스만 하고 결정적일 때는 역할을 못해"라고 하는 생각 같은 것입니다. 과거는 우려가 기대보다는 확실히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중관계가 경제와 인적 교류 등으로 근본적으로 변해가면서 이러한 상존하는 반대

감정 사이에도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박근혜-시진핑 정부 들어서 한중관계가 가까워지면서 기대의 측면도 더불어 상당히 증가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정부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중관계를 쳐다보는 일반 국민들 생각에는 그래도 중국정부가 역할을 좀 해줄거라는 기대감이 커졌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연초부터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반응은 우리의 그러한 기대에는 솔직히 못 미치는 것입니다. '국가이익' (national interest)이 걸린 치열한 문제인데 그렇게 기대하는 인식은 너무 감성적이며 따라서 '나 이브한' (naive) 것이 아니냐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더라도 그러한 생각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집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아마도 제1세션에서 한,중의 전문가들 사이에 심도 있는 토론이 오고 갈 것으로 봅니다만--과연 중국 정부는 현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는 나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어도 제가 이해하는 한국 정부의 인식은 '절박감'과 '위기감'입니다 (물론 우리 정부는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없습니다만). 저는 '지금' 우리가 북핵 개발을 막지 못한다면 멀지 않는 미래에 북한의 비핵화는 물 건너 간다고 봅니다. 중국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이라는 점을 누차에 걸쳐 천명해 왔습니다만, 이제 무언가 이를 위한 '시급한 행동'이 취해지지 않는 한 이를 지키기는 객관적으로 어렵게 되어있다고 봅니다. 지금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배가 산을 넘어가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중국이 혹시 우려하는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성 문제도 핵개발을 못함으로써 기실 더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둘 사이에 반드시 '비례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한국은 한중관계가 소중합니다. 중국이 우리 경제의 제1교역대상국인데 소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중 인적 교류의 최대 국가인데 소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중관계는 다방면에서 앞으로 더욱 발전해야 하고, 그럴 잠재성을 무한히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2 세션에서 다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국은 중국이 주도하는 AIIB에 적극 참여하였을 뿐 아니라 앞으로 국제 다자 제도들에서도 서로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다만 한국은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북핵문제가 서산을 넘어가는 것을 지켜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 그러한 상황이고 따라서 무엇이든 이것에 도움이 되는 조치들을 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중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문제도 그렇습니다. 세계의 어느 정부도 치명적인 국가의 안위가 걸린 문제에 직면하여 그에 대응하는 자위적이며 방어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사드배치가 중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만약 북핵문제의 시급성이 없었더라면 사드배치가 현 시점에서 거론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문제가 본말이 전도되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결과"로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북핵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면 중국이 우려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은 앞으로도 한미동맹을 견실하게 유지해 나갈 것이지만, 그러나 한중관계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의 이해에 부합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북한 제재 문제에 돌아가서 한 말씀 드려야 하겠습니다. 북한 제재가 구체화되기 시작하면서 북한의 반발도 거세질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상상력의 범위 안에 있습니다. 북한의 반응은 두 가지 일 것입니다. 하나는 국제사회의 압력에 굴복하여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강대강 (強對強)으로 더욱 세계 나오는 것입니다. 둘 다 현실적으로 상정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김정은 정권 들어서 두 가지 행태를 다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번 목함지뢰 사태 때처럼 우리 정부가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며 강력하게 나가자 이에 반발하면서 소위 최후통첩까지 보내는 제스처를 썼지만 이내 대화 하자고 전격 제의하면서 자세를 낮췄습니다.

지금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미국은 모든 전략 자산을 다 동원하여 군사적으로 북한을 압박하면서 또한 대북제재법을 발동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엔제재가 코 앞에 와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합동군사훈련은 3월에 시작하게 되어있고, 을지훈련까지 군사훈련은 8월 중순에야 끝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의 한국 정부의 기조를 보아서는 이 기간에 한국이 대화를 제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이번에 중국까지 나서서 북한 제재에 강력하게 나서기 시작하면 북한은 극심한 대외적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김정일 정권 시에는 핵실험과 관련하여 유엔제재를 포함한 대외적 압박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러한 정도의 압박은 김정은 정권에게는 초유의 일일 것입니다. 더구나 김정일 정권에게 취해졌던 압박보다도 훨씬 더 큰 강도로 압박이 가해질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과연 김정은이 이러한 압박에 직면하여 어떠한 태도로 나올지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강대강으로 나올 것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국제사회의 반응과 더구나 중국의 태도를 보고자 그리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국제 제재에 내성을 길러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버틸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김정은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대내적으로 과시하기 위한 목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제5차 핵실험도, 광명성 5호 발사도 각오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각종의 군사도발도 각오하고, 경계하면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북한의 대응의 노림수는 한 가지입니다. 국제사회의 분열을 노리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과 중국 사이,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국내의 여론 분열을 노리는 것입니다.

사실 북핵문제의 이면은 북한정권의 핵도발에 미국과 중국 등의 초강대국까지 휘둘림을 당해왔다는 다른 사실이 존재합니다. 영국과 프랑스만 안 들어가 있지 실상은 유엔의 5대 상임이사국 중에 서로 비토를 행사하는 양대 그룹인 미국, 중국, 러시아가 다 6자회담의 참여국입니다. 이들이 북한에 휘둘러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국제안보의 아이러니입니다.

이제 그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핵개발로는 결코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이 결코 허언(虛言)이 아님을 깨닫게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고삐를 틀어쥐고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때까지 지속적으로 압박해야 합니다.

21세기도 이미 초반은 지나가고 있는 지금에도 한반도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구시대적 유물 같은 이슈에 사로잡혀 미래로 전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가 모두 경제 위기의 질곡에서 벗어나고자 머리를 짜내고, 또 한편으로 21세기 지구적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지혜를 모르고 있는 시점입니다. 북한 핵문제를 풀지 못하면 한반도는 미래에도 이 문제에 발목이 잡힘은 물론 동북아 전체가 이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에게는 악몽임에 분명하고, 중국에게도 이로울 것이 없다고 봅니다.

한국과 중국은 글로벌 자본주의 하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들입니다. 세계 경제성장 역사에 살아있는 신화입니다. 그리고 한중의 협력이 이러한 성장을 가속화 시켜왔습니다. 이러한 협력과 성장은 미래에도 이루어질 것이고 그래야만 합니다.

한국과 중국 서로의 국경이 맞닿아있는 북한만이 이러한 역사의 선순환을 스스로 거부하며 고립된 섬처럼 남아있습니다. 북한 문제는 안보라는 앵글만을 통해서 쳐다보면 문제의 전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역사와 미래와 발전이라는 보다 크고 높은 시각을 통해서 볼 때 전체가 보입니다. 북한의 미래는 핵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중국이 가진 그 성장 에너지에 있습니다. 이 에너지를 공유하고자 할 때 북한의 미래는 열립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도 첫 번째 열쇠를 열어야 합니다.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북한의 비핵화입니다.